

「민중사회학」의 이론구조와 쟁점： 방법론적 논의

韓 相 震*

<차

례>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민중사회학」의 보편적 프로그램 : 그 기반과 이론적 과제 |
| II. 학문으로서의 「민중사회학」
의 특성 | V. 민중연합에 관련된 문제들 |
| III. 민중개념의 비판과 대안모색 | VI. 개방적 변증법을 향하여 |

I. 문제의 제기

이 글의 주제와 내용을 생각함에 있어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사회과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꾸준히 전개된 이상, 이제는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추상화된 수준에서 학문의 보편성, 특수성 등에 관한 문제를 재론하거나 실증주의, 현상학, 해석학 등의 방법론체계를 그 자체로 일반적 수준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사회학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이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학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급과 민중의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입장여하에 따라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분단 및 권위주의의 정치구조를 염두에 둘 때 이에 엊그제 작용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계급과 민중의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듯이 보인다. 그런데 계급에 관한 논의는 그런대로 근래에 활발히 시도되고 있음에 반해, 민중에 관한 논의는 처음부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 서울大 社會大, 社會學

있다는 인상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이 글에서 민중문제를 주제로 다루기로 정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닥에는 사실 민중과 계급은 같은 수준에서 파악될 현상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민중을 계급으로 환원시키는 전략은 이론적으로 오류일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민중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민중신학」, 「민중예술」, 「민중사관」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민중사회학」으로 수렴될 수 있는, 사회과학적 분석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을 보면 민중을 주로 경제적 모순의 축과 이에 연결된 계급론적 틀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로 여기에서 민중문제에 대한 최대의 이론적·실천적 긴장이 오늘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민중을 생산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유래하는 경제적 모순과 이것을 조명하는 계급이론의 틀을 가지고 민중문제를 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민중을 경제적 층위의 계급현상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결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필자는 민중개념을 계급이론으로부터 탈환하여 본래의 위치에로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계급이론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계급이론적 사회분석이 요긴할 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분야가 우리사회에 많다는 데 대해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이런 분석이 민중문제를 조명하는데 있어서도, 특히 민중을 多階級聯合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유효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민중논의가 계급이론의 축에 선험적으로 얹매이는데 대해서는 근거있는 異議를 제기하고 싶다. 민중논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모순을 중시하는 보다 복합적인 분석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 경우에 비로소 민중의 실체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중을 多階級聯合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연합의 사회적 기반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우려스러운 현상은 민중에 관한 논의가 오늘날 고도로 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개념이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전에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징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많은 혼란이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축면이 있지만, 개념이 명료해진다 하더라도 사실 민중개념의 정치성은 피할 수 없는 축면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민중사회학」

의 구체적—실천적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만 「민중사회학」을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민중사회학」의 가능성을 깊게 천착해 본다면 이것의 근거와 의의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립하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민중사회학」의 구조를 2원화시켜, 한편으로는 이것의 보편적 근거를 확립하고 이에 의한 연구조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 특정국면에서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는 진보적 힘의 결집으로서의 민중운동에 자신을 연결시켜 학문활동을 전개시켜 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필자는 이 글에서 「민중사회학」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중사회학」의 아이디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韩完相교수가 70년대의 경험을 소재로하여 발전시킨 것으로서, 이 안에는 시대의 문제에 직면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선구적인 사상이 여러 면에서 역력히 드러나 있다. 또한 경직된 사고를 피해가려는 韩교수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단순히 만족하거나 이를 거부하기보다, 필자가 느끼듯이 「민중사회학」의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의미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보려고 한다면 현재의 논의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직 제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복합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거의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할만큼 단조롭게 제시된 견해들도 없지 않다. 또한 이론체계가 아직 제대로 개발된 것 같지도 않으며 민중과 「민중사회학」의 관계가 동지의 관계로 너무 적절 연결되어 있어 필요이상으로 학문의 정치화를 가져오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요컨대 「민중사회학」의 학문적 기초가 아직 명료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필자는 이 글에서 「민중사회학」의 기본노선을 따르면서도 이것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II. 학문으로서의 「민중사회학」의 특성

「민중사회학」을 일단 학문체계로 이해한다면 우선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이것의 대상은 무엇이며 이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또 학문의 기초 개념들은 어떻게 구성되며 이것의 실천적 입장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질문은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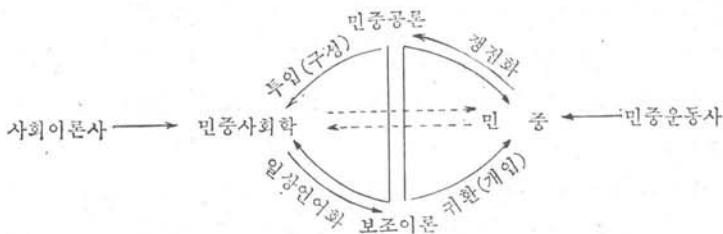
단순한듯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심도있는 방법론적·이론적·실천적 논의를 요구하는 것들이다.

「민중사회학」의 한 문제는 이런 질문들이 제대로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문의 자기인식은 고도로 급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韓完相교수에 의하면 「민중사회학」은 민중과 더불어 민중의 편에서 민중을 위해 노력하고 민중의 승리와 더불어 소멸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의 표현을 따른다면 「민중사회학」은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 역사와 새 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될 때…사라져 버려야 한다.”⁽¹⁾ 韩교수는 이처럼 「민중사회학」의 과제를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적 수준에서 파악하면서 이것의 당파성(Parteileichkeit)을 매우 급진적인 형태로 꾀려하고 있다. 「민중사회학」의 과제를 민중운동에 연결시켜 파악하고자 한다면 당파성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분명히 「민중사회학」의 한 독특한 측면이며 이에 관해서는 뒤에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민중사회학」은 일차적으로는 학문 체계이며 그러한 한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자체의 이론체계와 근거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학문이 민중의 승리와 더불어 소멸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이론이 아무리 당파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갖는 고유의 자율성과 이것이 대상과 맺는 긴장을 사상시킬 우려가 있다.

이것은 결코 학문과 정치, 이론과 실천, 사실과 가치등을 2원적으로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고전적 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론 역시 언어체계이며 그 안에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념에 내화되어 있는 규범성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민중사회학」은 이 면에서 더욱 그러하고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민중사회학」을 학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면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또한 민중지식인의 감수성과도 구별되는 이론내부의 체계와 학문적 뿌리를 확고히 다지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민중사회학」의 실천성과 더불어 학문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실존적 문제로부터 학문의 내적 구조에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필자는 「민중사회학」과 민중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韩完相, 民衆社會學, 종로서적, 1984, 49쪽.



이 모델은 변증법적이지만 「민중사회학」과 민중이 정치적인 수준에서 직접 동지의 관계로 연결되는 데서 오는 위험을 피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계 하에서는 「민중 사회학」이 학문으로 존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민중사회학」은 「아카데미 사회학」과는 달리 민중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원적으로 사회이론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왜 「학문」인지, 단순한 정치투쟁이나 민중운동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하기 힘들다. 때문에 「민중사회학」을 학문으로 정립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의 기반과 개념구조를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튼튼히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위의 모델에 의하면 「민중사회학」은 지식의 구성과 개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민중사회학」은 민중의 경험과 갈망에 의존하고 이것을 일종의 “원자재”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민중에 가까워지려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백지의 상태에서 민중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이론으로서의 일정한 개념구조와 전략 안에서 민중으로부터의 투입을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해 간다는 것이다. 「민중사회학」을 규정짓는 것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이 아니라 이론적 실천이며 민중으로부터의 투입은 이 실천의 자율성 하에서 「민중사회학」의 원자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사회학」을 특징짓는 실천의 개념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파라다임의 특성이 사회이론사의 맥락에서 충분히 밝혀져야만 된다.

둘째, 지식의 실천적 개입에 있어서 「민중사회학」은 민중의 편에 서서 이들의 현실인식과 실천능력의 고양을 목표로 삼지만, 개입의 모델은 적접적으로 정치적이라기보다 담론을 통한 계몽의 특징을 갖는다. 요컨대, 「민중사회학」은 자체의 특수한 이론적 실천에 기초하여 그 결과로 나온 「지식」을 가지고 민중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사이를 잇는 보조이

론이 잘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민중과의 관계에 긴장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민중사회학」이 민중운동을 한편으로는 적극 지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의 조건과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위에 살펴본 첫번째 특성, 즉 지식의 구성에 관한 문제는 결국 「민중사회학」이 어떤 이론적 조건 하에서 민중문제에 접근하는가에로 귀착된다. 이것은 많은 논의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질문임에 틀림없다. 그럴듯한 수사학적 어휘나 이데올로기적 태도로 얼버무리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해 심각하게 대면해야 할 질문임에 틀림없다.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하나의 관점만을 적자면 「민중사회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은 모순과 모순의 관리를 둘러싼 구조화의 축과 갈등을 둘러싼 행동의 축, 그리고 이 두 축의 관계를 독특한 방식으로 엮어가는 변증법 개념이 될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물론 복합적인 사회구성체의 시각이 전제된다. 즉 사회형성의 각 층위에서 전개되는 모순과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체제 내부의 시도, 그리고 이와의 연관 속에 나타나는 갈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의 내부구조가 그만큼 충실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특성, 즉 지식의 개입에 관한 문제는 「민중사회학」이 민중운동과 맷는 당파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또는 달혀진 완결성보다는 열려진 유동성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방적 변증법”的 특성을 갖는 관계에로 모아진다. 물론 여기서는 두 가지의 관점은 명백히 거부된다. 하나는 「민중사회학」이 마치 민중운동 위에 군림하는 것인양 이를 특권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마치 민중운동을 단순히 대변하고 지지하는 것인양 이를 수단화시키는 것이다. 학문의 특권화는 학문의 절대화를 요구하며 이것은 학문과 절대권력이 결합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학문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민중사회학」을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중운동에 내재할지도 모를 문제를 조명하고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사회학」이 이데올로기나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서 민중운동에 개입한다는 것의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는 「민중사회학」이 지식의 구성과 개입에 있어서 민중운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럼에도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학문체계로서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전개된 논의를 위의 모델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논의가 민중운동→민중공론→보조이론→민중운동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고리에 치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민중공론이란 예컨대 민중의 私的인 경험이나 당연시된 생활세계 (Lebenswelt)로부터 공적인 쟁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언론과 출판 및 결사가 중요하며, 韓完相교수가 강조하는 「민중사회학」의 비판적, 자기성찰적 과제(예컨대 私事化의 거부)는 기실 여기에 해당한다. 보조이론은 「민중사회학」이 생산해내는 지식이 민중의 실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일상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보조이론은 현실의 압력으로부터 학문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학문을 정치적 실천으로 접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韩完相교수가 논하는 지식인의 역할과 민중교육의 문제들은 모두 이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중사회학」과 민중을 연결하는 순환의 고리가 아직 충분히 발전되기보다는 한 쪽 지름길로 빠져나가 있다는 느낌을 피하기 힘들다. 이 고리를 보다 완전히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민중사회학」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문제들을 정당하게 제기해야 한다. 또한 「민중사회학」이 학문으로서의 객관성과 진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어려운 문제도 제기해야 한다. ⁽²⁾

III. 민중개념의 비판과 대안모색

「민중사회학」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중의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아직 합의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개념 규정은 각자의 자유일지도 모르지만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논의가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무엇보다

(2) 논의의 수준에서 귀감이 될만한 것은 : 백낙청, “학문의 과학성과 민족주의적 실천”, 송진호·강만길(편), 한국민족주의론Ⅱ, 창작과 비평사, 1983, 421-461면, 같은 맥락에서 “민중사회학의 과학성”을 거론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민중의 개념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특히 발전수준이 우리와 유사한 제3세계 나라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조명하는 데도 암시하는 바가 클 것이다.

1. 남미에서의 민중개념

이 때 남미의 경험은 특히 흥미로운데 이것의 몇 가지 특징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민중(Pueblo 혹은 lo popular)의 개념이 계급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또 그렇게 사용되었다. 실제로 민중은 역사의 특정 국면에서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집단들의 연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둘째, 민중은 수입대체공업화와 민족주의적 발전 이데올로기로 특징되는 1930년대 아래의 역사적 상황에서 대두한 것이다. 이것은 곧 민중의 대두에는 그럴듯한 실제적인 사회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민중은 농업중심적인 과두제를 공동의 적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산업지향적인 기업가, 노동자, 중산층의 연합으로 구체화되었다. 넷째, 민중이 사회경제적, 정치적 발전과정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한 데는 부르조아계급이 취약했던 남미의 상황이 작용했다. 다섯째, 민중노선의 정치가 등장하게 된 데는 또한 사회주의적 정당과 계급조직이 취약했거나 또는 이를 억제코자 했던 당시 지배집단의 의도가 결과적으로 민중주의를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했다. 여섯째, 이러한 남미의 민중노선은 남유럽과 남미에 강했던 조합주의(corporatism)의 오래된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났다. 일곱째, 이러한 민중세력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분해되는 과정을 밟았다. 특히 노동자, 농민 등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이 계급적 급진성을 띠게 됨에 따라 산업가와 중산층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게 됨으로써 민중연합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⁴⁾

남미의 경험은 이런 특징을 지니거나 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자면 민중은 과두제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운동으로 나온 것이다. 즉, 이것은 일단 민중정치를 지향하는 세력연합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기반 위에

(3) Michael Conniff (ed.), *Latin American Popu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82.

(4) 拙著, 제3세계의 정치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한울, 1984.

서 민중융합적인 산업화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농업국가로부터 근대적인 산업국가에로의 이행이 민중정치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민중은 계급에 의해 규정되기보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의 새로운 집합체로 등장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미의 민중정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여 결국 무너졌다. 이에 관해 우리가 논할 지면은 없으나 남미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비극의 원인이 된 민중세력의 분열이 그 당시 과연 불가피한 것 이었는지, 아니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이론적, 전략적 실수 때문이었는지를 냉정히 가려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2. 한국사회의 민중논의 : 계급론적 접근

이 점을 배경에 두고 우리사회에서의 민중논의를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민중개념이 발견된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민중을 생산노동자, 도시빈민, 농민등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 보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 보기는 박현채씨의 논문 “민중의 계급적 성격규명”이고⁽⁵⁾ 후자의 보기는 韓完相교수의 저서 「민중사회학」이다.

박현채씨의 논의를 따르자면 민중은 주로 경제적 변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어느 계급이 구조적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민중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있다. 생산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지만 종속자본주의의 내적 취약성과 한국적 자본축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저임금상태에 머물게 됨으로써 조직적으로 착취되고 억압당하는 계급으로 분석된다. 도시빈민은 비공식부문 또는 주변계급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는데 불완전 고용 및 하청고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노동자 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간주된다. 한편 농민은 자본축적을 선호하는 국가의 산업정책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저곡가정책 등으로 인해, 도시 노동력의 공급원으로서, 또 농산물의 직접 생산자로서 구조적으로 궁핍화에 직면한다고 분석된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5) 박현채, “민중의 계급적 성격규명”, 김진균 외,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한울, 1985.

발전의 부정적 결과가 집중되는 곳에서 민중의 실체를 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에서 박현채씨는 자본주의의 법칙론적 발전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법칙이 민중을 부단히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그 자신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민중구성은 서로 관련지워진 순환계열 상의 다른 범주로 되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⁶⁾ 내용인즉 자본주의가 전개되면서 농민의 분해와 분화가 일어나고 농민층의 탈농민화는 도시빈민, 노동자의 생성과정으로 연결되며, 이런 순환과정에서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은 다같이 자본주의적 발전의 희생자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노동시간의 연장이 요구되고, 농민에게는 저노임과 값싼 공업용 원자재에 대한 요구가 저농산물 가격으로 될 수 밖에 없도록 하며, 도시빈민은 보다 복합적이고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불노동을 위한 요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되었을 때 그 전가 또는 큰 부담이 귀결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주된 민중구성원의 개별적인 자본과의 대립관계는 바로 민중구성원에게서 경제적 이해의 동일성을 가져다 주는 주요 기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의 일치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그 생성과정에서 상호관련지워진 순환계열 상의 다른 범주라는 데서도 밀접된다.⁽⁷⁾

이러한 분석은 매우 과학적인 듯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 실제로 관념적인 민중논의에 비해 실체를 분명히 잡으려는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점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논의를 요하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

첫째, 우선 민중의 범주를 경제적 층위의 계급범주에로 환원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보다 정확히 쓰자면 계급분석 자체의 가치를 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민중개념을 규정하려는 이론 전략이 타당한가의 의문을 느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민중은 사실상 프로레타리아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중개념을 지나치게 축소시킨다는 느낌을 준다.

둘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하나의 동질개념으로 묶는 근거가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논리적인 근거에 치중해 있다. 물론 박현채씨의 논의에서 이들 사이의 대립양성이 무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립의 양상을 정확히

(6) 윗글, 49면.

(7) 윗글, 53면.

지적하고 있다. 이런 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근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이들이 다같이 무산계급이라는 사실, 따라서 그들은 다같이 자본에 대립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이해의 일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장되는 이해의 일치는 엄격히 말해 이론체계의 논리적 결과이지 이들의 행위양식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분류의 기준이 경제적 소외라고 하는 객관적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이들 사이에 공유된 목표나 열망의 수준으로 심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낮은 차원”에서 발견되는 이들 사이의 대립을 “역사의 진보의 선에 따라 통일하는” 작업을 통해 비로소 민중이 실천의 주체로 형성된다고 한다면 왜 유독 이들 세 집단만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민중개념 여하에 따라 진보의 힘으로 결집될 수도 있는 다양한 중간집단들은 왜 민중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야 하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이러한 계급론적 민중논의는 상당히 완결된 논리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중은 사실 완결된 개념일 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개념의 회로가 완결된 논리는 비록 매우 과학적이고 엄밀한 듯이 보이긴 하지만 민중과 같이 열려진 사회현상을 다루는 데는 오히려 부적절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넷째, 이론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중개념이 주로 경제적 모순에 관련된 개념의 지평 위에서 파악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모순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못지 않게, 혹은 이보다 더 정치적 모순이 심각하고 본원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모순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운동, 특히 중간계급의 다양한 분파들의 열망을 제외시킨채 전개되는 민중논의는 자칫하면 이론구조의 편협성으로 인해 현상의 유동성과 패권성을 놓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비근한 예로 우리는 오늘날 「민주화」를 향해 분출되는 각계 각층의 열망을 목도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동과 권위주의체제 사이에서 생긴 정치적 모순의 표현이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은 연령과 학력 및 지역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열망의 분출과 운동 밖에서 혹은 이것의 의미를 가벼이 여기면서 계급노선의 민중운동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현실로부터 유리된 경직된 사고를 반영하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경직된 사고는 자칫하면 민중운동으로 결합되어

야 할 집단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 예컨대 진보를 향한 운동에서 우리가 부딪치기 쉬운 한계와 제약들이 기실 분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분단은 우리 민족이 자고로 경험해 온 최대의 정치적 모순이라는 것, 그리고 분단에는 특히 외세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일이다. 그만큼 이 모순의 여파는 어느 계급이나 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본질적으로 민족문제이며 통일운동은 그 여건과 전략여하에 따라 넓게 확산될 수도 있는 잠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중운동이 이 차원으로 진입하는 데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경직된 계급모델로 통일운동의 주체를 설정하려 한다면⁽⁸⁾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수용 불가능한 편향성을 뼈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경제적 층위에서 구성된 계급적 민중개념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할 때 나오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민중개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민중논의는 결국 이 시대의 모순을 어떻게든 진보의 방향으로 해결해 보자는 역사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민중=프로레타리아트라는 등식은 우리 사회의 발전수준과 이에 따른 내부의 복합성에 어울리지 않게 매우 협소한 개념설정이라는 느낌이 든다. 또 운동의 주체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실천의 면에서도 과연 타당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하겠으나, 우선 지적할 점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분단으로 특징되는 정치적 모순을 경제적 모순에 뜯지 않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성을 강조하되 복합적인 사고의 노선을 따라 민중개념을 완결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열려진 구조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작업은 실천의 면에서도 계급모

(8) 이삭 편집부, 인식과 실천 1, 이삭, 1985 중 제3부 제4장 “민족통일운동의 구조와 방향.”

델과는 다른 합의와 문제의식을 던질 것이다.

3. 한국사회의 민중논의 : 소외론적 접근

다음으로는 韓完相교수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우선 계급노선을 탈피하여 민중개념을 보다 복합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끈다. 그는 민중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볼 것을 제의하면서 이 관계를 다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민중은 정치적 통치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 경제적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 그리고 문화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을 韓교수는 각각 정치적 민중, 경제적 민중, 문화적 민중이라 부른다. 여기에 지식인 문제가 덧붙여 거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韩교수의 민중구성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정치적 민중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적 소외가 경제적 소외 못지 않게 중요한 독립변수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계급이 민중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지만 민중이 계급개념에 종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⁹⁾ 따라서 그는 민중=프로레타리아트의 등식을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정치권력이 지배의 모델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라는 데 있다. 韩교수가 지적하였듯이, “현대에 와서는 지역과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 즉 통치수단을 장악한 집단이 곧 그 체제의 지배세력이 된다는 사실”에 의해 “민중의 성격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치적 민중이 현대사회에서는 민중의 핵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⁰⁾

韓교수의 논의는 복합적 사고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또 정치적 차원을 정당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익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민중의 분류 기준이 일반적인 성격을 떠나 계급논의의 한 장점이었던 구체성을 다른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상실한 감이 있다. 예컨대 정치적 통치수단으로부터의 소외나 경제적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소외는 東西古今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민중

(9) 韩完相, 民衆社會學, 67면

(10) 윗 책, 26면

(11) 윗 책, 17면

은 자고로 어디에서나 있다는 결과가 된다.⁽¹²⁾ 이것은 민중개념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이것의 역사성과 구체성을 흐리게 만들 위험이 있다.

둘째, 추상적, 비역사적 분류기준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韓교수는 「즉자적 민중」과 「대자적 민중」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중개념은 더욱 혼란에 빠지는 면이 있다. 즉자적 민중은 “잠자는 민중”으로, 대자적 민중은 “잠에서 깨어난 민중”으로 묘사된다.⁽¹³⁾ 진정한 의미의 민중은 물론 후자이지만 그러나 즉자적 민중의 개념은 마치 민중이 민중으로서의 의식이나 행동이 없이도 역사에서 항상 “거기에” 이미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간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엄격히 말해 “즉자적 계급”이라는 개념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계급에는 계급을 구성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의 사회적 기반은 다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의 주체로 부각되지 않는 한 그 실체는 상당히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이다. 다시 말해 즉자적 민중의 개념에 어떤 객관적 이해관계를 부여하기에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유용한 사회학적 분석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¹⁴⁾

필자의 생각에 민중의 정치의식은 정도의 문제이지 민중의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원칙상 잠자는 민중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韩교수의 표현대로 지배집단이 만들어내는 “자장가 소리에 아기처럼 소록소록 잠들고”, 그들이 제조하는 “아편에 아편장이처럼 무력하게 중독되는” 집단, 혹은 이른바 “허위의식”에 빠져있는 집단은⁽¹⁵⁾ 민중의 한 유형이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신민으로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즉자적 민중의 개념을 이렇게 포기한다 하더라도 대자적 민중의 개

(12) 즉자적 민중의 보편성이 바로 이것이다. 韩교수의 표현대로, “객관적 피지배자로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즉자적 민중은 인류의 역사가 있어온 이후 언제나 존재해 왔다. 우리의 경우 단군 이래 그들은 한국 역사 속에 줄곧 존재해 왔다. 어느 역사, 어느 사회구조 안에서나 지배자가 있고 통치집단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러한 민중은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으며 또 존재할 것이다.”(28면).

(13) 윗책, 27-30면.

(14) 韩교수는 이에 관해 윗책 27면, 주 (18)에서 부연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즉자적 계급을 보는 것과 같은 시각이 즉자적 민중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5) 윗책, 28면.

념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 앞서 보았듯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소외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보자는 제안은 좋으나 이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집단들의 행위가 어떻게 민중이라는 공통의 집합성을 띠게 되는지에 대해 사회학적 설명이 없는 것이다. 韓교수는 민중이 프로레타리아보다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의 개념임을 정당하게 강조하고 있지만⁽¹⁶⁾, 기원의 면에서 이질적인 사회집단들을 민중개념으로 묶는데 전제되어야 할 사회적 근거에 관해서는 다소 일반적인 논의를 제외하고는 별로 논의한 것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궁극적 이유는 필자의 생각에 韩교수가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모순의 전개와 이것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민중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추상화된 소외이론의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민중은 일단 “…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으로 파악되고, 객관적으로 소외되었으나 정치의식은 아직 잡자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즉자적 민중의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추상적 수준에서 3차원의 소외모델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대자적 민중의 경우에서도 이질적인 집단들을 묶는 사회적 공통기반의 해명이 불분명해지는 것이다.

4. 대안의 기본노선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와 민중개념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민중사회학」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우선 위의 논의로부터 얻은 것만을 요약하자면 좁은 의미의 계급모델도, 너무 일반화된 소외이론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전자는 구체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환원주의적 단점이 있으며, 후자는 복합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구체성을 상실하는 단점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하나의 대안은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모순모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되 민중은 원래 정치적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히 정치적 모순과 이것의 극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모순의 전개와 이를 둘러싼 실천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치적 모순의 하나는 국가권력체계로부터 사회의 각 부문에 확산되어 있는 권위주의의 구조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개헌으

(16) 월책, 67면.

로부터 지방자치제, 언론, 교육, 노사관계, 여성, 청년, 농민문제 등에 걸쳐 밑으로부터의 의사표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차원의 운동과 더불어 경제적 모순을 둘러싼 운동들, 예컨대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배분정의를 위한 운동, 또는 무역개방 등을 둘러싼 외부압력에 저항하려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민중은 이런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순의 극복을 지향하는 실천의 주체로서 이런 다양한 참여의 열망을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해 서로 결합시킬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구체성과 더불어 복합성을 강조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민중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이라 함은 여기서 분석의 영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분석의 수준에 관련된 것이다. 즉 「경제」와 구별되는 「정치」의 뜻이 아니라 어느 영역이건 간에, 예컨대 이것이 국가관료제건, 민간기업이건, 노사관계이건, 학교이건 혹은 가정이건 간에 분석의 수준을 임금이나 봉급같은 경제적 변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혹은 참여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변수에 맞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시각에서, 그리고 오직 이런 시각에 의해 우리는 민중이 일차적으로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민중은 이미 어느 정도 깨어있는 정치의식과 상정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로 구성된다. 즉 참여를 원하면서 공통의 적에게 분노를 느끼는 집단들로 구성된다. 비록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를지라도 사회 각 층위의 지배과정 안에서 계급들을 가로지르는 유사한 심성과 갈증으로 묶어질 수 있는 집단들이 민중을 이룬다. 따라서 민중은 "...으로부터의 소외"라는 소극적, 부정적 측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을 향한 갈증과 열망"이라는 적극적 측면을 갖는다. 특히 배제와 참여의 균열모델은 의미있는 테, 이에 의하면 배제의 실상이 심하고 참여의 열망이 높을 수록 균열의 정도는 높아진다. 이 균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며 사회의 많은 영역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이론바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배경에 두고 한 것이다. 요컨대 사회형성의 각 층위에서 그동안 참여의 통로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해체했던 관료적 권위주의의 결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는 오늘날 참여열망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중문제가 의미있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민중문제에 접근한다면 민중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집합체로 나타나며, 즉자적 민중과 같은 개념은 처음부터 불필요해진다.

다른 하나의 대안은 너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민중의 생활사적 기반과 공동체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또한 사회과학에 풍부하게 전수되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에 충실해지려는 자세에서 민중을 일상적인 삶의 주체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 수준에서 민중을 본다면 이것은 역사의 특정국면에서 다양한 세력의 연합으로 등장하지만, 일상적인 삶을 꾸려가는 주체로 본다면 민중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이 차원의 민중을 우리가 즉자적 민중과 같은 개념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잘못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행위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꾸려가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중문제에 접근하는 데 두 가지 이론전략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는 일상생활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이 경우 민중은 서민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이 경우 민중은 균원의 면에서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들의 수평적 연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민중문제를 보는 두 가지 구별 가능한 방식을 뜻하며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민중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민중사회학」의 내용도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IV. 「민중사회학」의 보편적 프로그램 : 그 기반과 이론적 과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필자는 「민중사회학」이 상이한 두 가지 근거에서 서로 연관되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것이 보편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이고 유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민중을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정치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 이러한 접근은 세력연합을 다룬 때처럼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비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양식에 관련된 문화적 해제모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민중문화운동은 기실 이 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성기, “그랑시와 문화운동,” 공동체문화 3, 1986, 168-186면.

그러나 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원의 면에서 이질적인 집단들을 하나의 구심권으로 묶는 끈이나 원리 혹은 힘의 규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중사회학」의 프로그램을 원대하게 구상해보고자 한다면 사회과학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민중사회학」이 사회학을 구성하는 다양한 특수분과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되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뿌리를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민중사회학」을 관통하고 있는 역사인식이다. 자명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일상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체라는 생각, 좀 더 사회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사회구조 혹은 사회질서라고 부르는 것이 다른 어떤 신비한 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자유 및 그 안에 전개되는 행동들을 통해 구성되고 변형된다는 생각에 스며있는 방법론적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은 분명히 엘리뜨 중심적인 역사관이나 사회관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 안에는 민중주의적인 인식의 맹아가 숨쉬고 있다. 우리는 이 차원의 민중주의를 「정치적 민중주의」와 구별하여 「인식론적 민중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정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의미의 「인식론적 민중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회과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자연」의 모델을 「역사」에 적용코자 했던 「과학주의」의 도그마에 대항하여 사회과학의 특유한 문제의식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논의들 안에⁽¹⁷⁾, 그리고 엘리뜨 중심의 시각에 반대하여 일상인의 문제를 중시했던 논의들 안에⁽¹⁸⁾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분명하게 이것이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중사회학」의 방법론적 기반을 정립하는 데 있어 이들 학문조류에 대한 성찰과 이로부터 얻는 결과의 수용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의미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회과학에 있어서 민중논의는 일

(17) Fred Dallmayr & Thomas McCarthy (eds.), *Understanding and Social Inquiry*,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18) Alfred Schutz,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Northwestern Univ. Press, 1969.

종의 메타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이에 관해 자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특히 근래의 언어이론을 수용할 때 분명해진다. 민중은 본질적으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의 공동체로 나타나며 사회과학은 이 언어의 터전 위에서 성립한다.⁽¹⁹⁾ 모든 중요한 사회적 사실은 이 터전 위에서 전개되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그 뿐만 아니라 민중과 부단히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이 밝혀진다면 이에 근거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사회학」의 보편적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때 제기되는 몇 가지 이론적 문제를 살펴보겠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상의 문제, 예컨대 일상적인 삶을 연구한다고 할 때 자료는 어떻게 수집·재구성할 것이며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곳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²⁰⁾ 여기서는 순수하게 이론적인 문제만 다루겠다.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하나는 우리가 민중의 일상적 삶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할 때 어떤 이론적 조건이 필요해지는가이다. 즉 대상의 특성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모델이 전제되어야 하는가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중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 민중과 맷는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성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방향의 면에서는 해답이 일찍부터 주어졌던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 결과로 나온 이론구성에서는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왔다. 결론부터 적자면, 민중의 일상적인 삶을 연구한다고 할 때 필요해지는 이론적 모델은 행동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은 행동의 다양한 계기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의 기초에 관해 말한다면, 민중의 삶을 단순히 기술하는—어느 의미에서 인류학적인 접근에 가까운—작업에 앞서 그 기초가 되는 행동이론의 틀을 다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의 역사에서 보자면 행동이론에의 지향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어쩌면 이들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서면서) 오직 근래에야 비로소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인 접

(19) Gerald Radnitzky, *Contemporary Schools of Metascience*, Chicago: Regnery, 1970.

(20) 이 책에 수록된 김광억 교수의 논문을 참조할 것.拙稿, “민중과 사회과학”, 유재천(편), 民衆, 문학과 지성사, 1984, 153-168면.

근과 이론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중사회학」이 튼튼한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들의 의미를 내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헤겔로부터 시작해서 민중의 삶을 보는 시각의 흐름을 지성 사적으로 간략히 개관해 보겠다. 헤겔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역사주의의 창시자로서 그는 누구보다 민중의 삶이 곧 실천의 역사임을 분명히 갈파했기 때문이다.⁽²¹⁾ 그럼에도 그는 독일의 전통인 관념철학의 유산을 이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시각의 의미를 충실히 발전시키기 보다 실천을 정신의 운동으로 파악하여 이론화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론적 혁신과 만나게 된다. 그는 한편으로 역사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일의 관념철학에 반대하여 실천우위의 역사관을 발전시켰는데, 그가 발전시킨 사상의 묘미는 실천의 주체인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설적으로 그 실천의 결과에 예속되고 이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의 접근은 계급모델이라는 점에서 민중모델과는 다르지만 연구의 대상이 재생산적 실천에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²²⁾ 다른 한편 그는 이론과 대상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술공학적” 모델을 거부하고 진정한 의미의 “실천적” 개입모델을 구상했는데 이것 역시 선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곧 위에 제기한 두 가지 문제가 마르크스에 의해 비록 초보적인 형태일망정 분명히 제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뒤를 이은 방법론적 논쟁에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음을 우리는 예컨대 해석학, 현상학, 구조주의, 비판이론, 민중생활방법론(ethnomethodology) 등에서 확인한다.

이 점을 배후에 전제하고 민중의 삶을 연구하는 데 전제되는 이론적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어쩌면 경제적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동하는 삶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것으로는 「민중사회학」이 성립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민중사회학」을 말할 때 사회학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해답은 마르크스와 베버에서 다같이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21) G.W.F. Hegel, *The Phenomenology of Mind*, New York: Harper & Torchbooks, 1967.

(22) Adolfo S. Vazquez, *The Philosophy of Praxis*, London: Merlin Press, 1977.

말해 민중은 실천의 주체로서의 민중이며 따라서 사회학이 보는 민중의 삶은 실천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동력으로서 실천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은 무엇이 있는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나면 우리는 다소 당황스러운 충격을 받게 된다. 사회학에 핵심적인 행동이론이 아직도 많은 결함 속에 싸여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민중사회학」의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현대사회학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분명히 실천의 물적 성격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이하게도 그 뒤 실천영역에 작용하는 구조화된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몰입했을 뿐 실천 자체의 고유한 역동성은 주변으로 밀어내 버린 셈이 되었다.⁽²³⁾ 이 결과 실천의 알맹이가 빠진 구조이론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뒤 우리는 사회과학의 역사에서 두 가지의 커다란 조류를 발견한다. 하나는 뒤팽, 만하임 등으로부터 구조기능주의에 이르는 이른바 「사회학주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상학, 해석학 등에서 발견되는 다분히 주관적인 설명방식이다. 전자는 행동을 사회경제적 조건의 반영이나 제도화된 역할기대 등으로 설명하고, 후자는 행동을 생활세계 안의 의미의 표출로 이해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주관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적절히 종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도 있겠으나, 필자의 느낌에 보다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행동영역의 고유성을 의식의 변수나 사회경제적 변수에로 환원시키는 전략이 과연 정당한가의 의문이다.

이에 관한 문제를 이곳에서 깨끗이 해결할 수는 없다. 어차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원주의를 피하면서 인간행동을 세롭게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지적 흐름이 근래에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적이다.⁽²⁴⁾ 이들의 계보는 다양하지만 이들은 본질적으로 언어와 상징의 원시적 실천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입장을 취한다.⁽²⁵⁾ 이 입장에 의하면

(23) 한 예가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존재하지만 이에 관한 이론은 발견되지 못했다. “상징적, 언어적 교섭행동”的 개념도 존재하지만 이론으로는 전연 개발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노동의 개념은 가장 잘 발전된 경우이지만 이것 역시 뒤에는 추상화된 가치이론으로 흡수된 면이 있다.

(24) 중요한 흐름들을 몇 가지 들자면 푸코(Foucault), 데리다(Derrida), 라캉(Lacan) 등을 중심으로 한 후기구조주의의 흐름들, 하버마스(Habermas)로 대표되는 비판이론 혹은 비판적 해석학의 흐름들, 그리고 가핑클(Garfinkel)이래의 민중생활방법론을 들 수 있다.

(25) Rosalind Coward & J. Ellis, *Language and Materi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의식의 변수는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상징의 구조화된 흐름들에 엊물려 형성되는 하나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또한 인간행동을 이끌어가는 힘으로서의 상징은 전통적인 계급법주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노선의 사고는 뒤에 다룰 정치적 차원의 민중문제를 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기원의 면에서 이질적인 집단들을 역사의 특정국면에서 민중이라는 공통의 틀에 묶는 것은 행동영역 내부의 고유한 물적·상징적 힘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른바 사회적 조건이나 이에 상응하는 세계관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것은 난파되기 쉬울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급법주에 상응하는 이론적 모델을 민중법주에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중은 계급과 달리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규정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기에 민중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실천의 고유성을 조명해 주는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민중사회학」이 한편으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재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에 언급한 행동이론의 개발을 통해 민중의 삶을 실천의 역사로 조명한다고 할 때, 이런 지적 활동이 민중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이다.

우선 분명한 것은 민중을 단순한 관찰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의미에서의 「객관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중사회학」은 과학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적 활동이 대상과 맺는 변증법적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론과 실천에 관한 마르크스의 모델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델은 이것의 참 뜻과 양립되기 어려운 다른 요소들과 뒤섞여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그가 남긴 유물사관과 계급론적 시각은 그 뒤 하나의 완결된 개념체계로 발전하면서,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할 때 이론이 특권화됨으로써 절대적 권력으로 변신할 수도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되 이런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민중사회학」과 민중이 맺는 실천적 관계는 결국 열려진 언어의 성찰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중이 언어공동체로 존재하듯이 「민중사회학」도 하나의 언어이며 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실천을 통해 그 결과가

민중운동의 능력고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석되는 민중의 삶이 먼 과거의 것이건, 가까운 과거의 것이건, 아니면 현재의 것이건 간에 「민중사회학」이 의도하는 것은 일련의 분석을 통해 민중이 그들의 삶을 조직하는 방식과 이 안에 표현된 실천능력을 조명하고 또한 그 안에 작용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늘의 민중이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높은 실천능력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V. 민중연합에 관련된 문제들

앞서 보았듯이 민중이 삶을 꾸려가는 방식과 능력에 주목하여 연구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정치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 경우 자료는 다양한 근원의 언어가 될 것이며 이것의 재구성을 통해 보통사람으로서의 민중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꾸려가고 여기에 어떠한 제약이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을 정치적 수준에서 접근하면 논의의 초점이 날카롭게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특정국면에서 전개되고 있거나 전개될 수 있는 민중운동이 학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중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 부상한다. 단순히 개별적 행위의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잠재적으로 연합가능한 집단적 행위의 주체로 나타난다는 민중 개념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를 이루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지배의 메커니ズム과 이에 대한 도전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유념할 점은 민중개념은 계급법주와 같은 축에서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근원의 면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집단들이 역사의 특정 국면에서 계급의 경계를 뛰어넘어 집합적·정치적 유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때 민중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민중사회학」은 구체적·유동적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수준에서 우리가 민중논의를 보다 균형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이론적·개념적 문제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

째, 마르크스의 “허위의식”의 개념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허위의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전체화를 우려하고 경계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중은 허위의식에 차있고 「민중사회학」은 이를 고발한다는 식의 관계설정은 전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중의 인지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해야만 「민중사회학」이 성립될 수 있다.

둘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민중의 위치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들이 항상 억압받고 소외당한다는 식으로만 보는 것도 상당히 일방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민중개념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적 수준에서 민중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허위의식이 부분적인 현상이듯이 억압도 부분적인 현상이며(만일 이것이 완벽하다면 이로부터의 해방은 그만큼 요원한 일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을 꾸려가고 역사를 성취시켜가는 민중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민중의 실천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셋째, 권력의 개념도 보다 신중히 탄력성 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지배자는 마치 권력을 전적으로 독점하고 민중은 권력이 전혀 없는 양 취급한다든지, 지배자는 권력의 행사를 통해 민중의 의식을 조작하고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하는데 반해 민중은 무력한 채 권력에 복종하거나 침묵한다는 식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대립모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을 상정해야 하고 권력에 의한 통제효과를 과장하기보다 권력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²⁶⁾

그렇지 않다면 「민중사회학」의 이론구조 안에 경직된 단절성과 대립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이것은 실천의 구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韓完相교수의 논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논의를 보면 현실과 미래 사이에는 단절과 비약이 전제되어 있다. 현실은 질곡이고 미래는 유토피아이다. 이 사이에는 「진화」의 모델이 겔 틈이 없고 오직 비약이 기대될 뿐이다. 이러한 논의는 미래에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학문의 현실적 합성을 위해서는 모델이 너무 단순하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기본 시각과 어울리지 않

(26)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학의 기본법주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해지는 데, Giddens의 논의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Anthony Giddens,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London: Macmillan Press, 1979.

는 개념은 폐기되거나 적절히 수정되어야 하고 실천의 프로그램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 점을 전제하면서 「민중사회학」이 구체적이고 유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민중개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우리사회에서 과연 어떤 집단들이 오늘날 민중의 실체로 등장하고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민중개념의 구성에 작용한 분류의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2) 민중의 사회적 공통기반은 무엇인가? 다양한 집단들이 각각의 이질성을 넘어서서 수평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민중개념과 계급개념의 차이를 생각할 때 특히 중요하면서도 해답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3) 이들의 실천목표는 무엇인가? 민중적 세력연합이 형성되었다고 할 때 이들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프로그램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은 민중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의 문제가 되겠지만 「민중사회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론과 실천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정치상황에 엊물려 작용하는 「민중사회학」의 프로그램은 시간의 흐름과 날카롭게 대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의 규범적 입장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 추상화된 수준에서 민중의 편에 선다는 정도의 실천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실천가능한 실천의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민중사회학」의 당파성과 앙가주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중사회학」은 이런 실천적 국면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 민중주의」와 만나게 된다. 민중정치가 그러하듯이 「민중사회학」 역시 민중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천의지 위에 민중에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작용방식은 서로 다르다. 「민중사회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의 체계 안에서 활동하는 데 반해, 민중정치는 실제적인 참여와 동원 및 투쟁의 형태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둘에 작용하고 있는 실천적인 가치전제는 매우 유사한 것이다. 「민중사회학」과 민중정치는 기원과 효과의 면에서 서로 교리를 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특유의 변증법적 긴장관계가 존재

한다.

그렇다면 위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민중개념을 정치적 수준에서 구성한다고 할 때, 다시 말해 민중을 이루는 다양한 집단을 추출해 낸다고 할 때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오직 세 가지 관점만 이곳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민중을 구성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모순에 연결되어 이것의 극복을 지향하는 의지와 운동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자의 경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좌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만일 그렇다면 노동자는 자고로 항상 민중이 될 것이다—그들이 정당한 요구를 개진할 수 있는 참여의 통로는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그들의 권리의식은 증가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변화의지를 표현하려는 경향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중진영에 진입하는 최초의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어느 집단이 민중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사느냐 못사느냐 그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다. 물론 빈곤과 배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원칙상 참여 없는 빈곤의 개선은 가능하지만(기술관료주의), 빈곤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 참여는 생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빈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민중개념에서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배제와 참여의 정치적 차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입장의 실천적 함의를 적자면, 민중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빈곤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책임있는 행위의 주체로서 사회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 전제 위에서 그들이 그들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개선해간다는 것을 뜻한다. ⁽²⁷⁾

(27)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남미 민중주의의 한 결함을 발견하게 된다. 민중주의는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지만, 실상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민중은 민중조직(예, 노동조합)을 장악한 일부와 정치지도자에 의해 끊임없이 동원되고 그 댓가로 경제적 보상(예, 임금인상)을 받은 정도였지 민중이 진실로 책임있는 행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개혁(예, 노조의 민주화)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결과 민중정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내생적 힘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동원위주의半기술관료적인 민중운동의 모델은 자칫하면 민중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책임있는 민중의 출현을 위해 반드시 비판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민중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의사를 표출시켜주는 일종의 “이익 대리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 및 제도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학생과 교회 및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생활에 관련된 모순에 대응하지만 또한 다른 집단, 특히 소외된 집단들에 대한 연대감으로 이들 집단들의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익 대리표출의 기능을 하는 집단은 민중개념의 구성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교적 다른 집단들보다 고정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기원의 면에서 이질적인 집단들을 공통의 틀로 묶는 집합체로서, 혹은 이들 사이에 가교를 놓는 매개자로서, 혹은 한 집단의 상황을 다른 집단의 관심으로 접목시키는 릴레이 상의 주자(走者)로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지역, 계층, 문화로부터 충원된 학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회적 이질성을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중을 일차적으로 정치적 수준에서 접근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중간계급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유는 여러가지 여전으로 볼 때 이들이 권위주의의 병폐를 가장 잘 실감하고 이것의 극복을 열망하는 집단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모순은 비단 정부 조직이나 민간관료조직에서만이 아니라 언론, 출판, 학문의 분야에, 인권영역에, 모든 예술과 문화분야에, 교육제도와 노사관계 안에,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활동 안에 다같이 스며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에 대한 저항의 잠재력도 광범위하다.

때문에 오늘의 정치현실에서 중간계급을 이루는 많은 집단들은 민중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외연에 위치시킬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 위치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참여욕구는 높은 반면 권위주의의 유산은 매우 강하고로 이들의 좌절과 불만이 심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의 의미를 경제적 이유로 과소평가하는 것은 재고해 볼 만한 일이다. 이들이 근대화의 수혜계층이라거나 노동자와 비교할 때 이들이 조직의 중간 수준에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오늘의 정치 현

실에서 이들을 민중개념으로부터 제외시켜도 될 이유일 수는 없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거주의 학력수준이 높은 신중간계급의 향배는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문제, 즉 민중이 다양한 집단들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고 할 때 이들을 묶는 원리에 관해 살펴보겠다. 이에 관한 이론적 해답의 관건으로서 행동이론의 중요성을 위에 지적하였지만, 이것은 이론적 조건에 관한 것이고 보다 실제적인 수준에서 해답을 찾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 다. 오직 세가지 관점만 간략히 꾀려 할 뿐이다.

첫째, 가장 초보적인 것은 다양한 집단을 민중으로 묶는 정감적 유대와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배집단이나 상류층과는 다른 “민”을 이룬다고 하는 느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이들 에게 복종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신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나라의 주인 이라는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의식들이 연결됨으로써 산만 하지만 그러나 실재하는 집합의식이 민중의 정감적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민중적 집합의식과 같은 것이 우리사회에 그 런대로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로 이해되는 “민” 은 상류층과 엄연히 구별된다는 느낌이 퍼져 있고, 후자는 전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리감도 강하며 민은 단순히 상류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성으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식도 뚜렷하다. 이러한 원초적 인 정감적 흐름은 오늘날 계급의 경계를 초월하여 확산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둘째, 이런 기반 위에서 공통의 이해와 열망을 발견하고 이것을 실현가능 한 실천의 프로그램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열망을 병렬적으 로 나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중운동이 전개되는 시간의 축을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흡수하여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재배 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 모순으로부터 출 발하여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비준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때 다양한 집단들을 접합시키는 원리는 그들의 열망 안에 이미 소재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속가능한 실천의 프로그램 으로 체계화시키는 이론적 작업으로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이고 유동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민중사회학」이 현실적으로 필요해지는 이유의

하나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런 접합의 원리를 현실 안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도 세력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남미의 경우를 잠깐 보자면 이 역할을 주도했던 집단은 민중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과두제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산업가, 노동자, 중간층 등을 민중연합으로 묶는 데 성공했고 개인의 열망과 민족국가의 열망을 민중의 이데올로기로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상황은 다른 것처럼 보인다. 민중주의의 힘은 밑으로부터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지만 정당구조는 아직 전체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진정한 의미의 민중적 지도자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계급을 축으로 한 정치활동의 지평은 더욱이나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민중주의가 풀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많이 성숙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의 대리표출 집단과 제도의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근원의 면에서 다양한 세력을 한데 묶는 데 이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이들의 전략여하에 따라 민중운동의 결과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민중운동과의 연계에서 「민중사회학」이 제시할 수 있는 실천의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의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특히 중간계급의 집단들이 민중운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보면 노동자는 정치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중간층은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사이의 관계는 대립적이라기 보다 상보적이며 이들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결합시키냐의 중대한 문제가 이로부터 나온다. 하나의 방법은 관료적 권리주의가 무너지는 전환기의 변동 논리에서 볼 때⁽²⁸⁾ 정치적 모순의 극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모순이 덜 중요해 서가 아니라 정치적 모순이 극복됨으로써 그 기반 위에서 다른 모순의 극복이 실제로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 민주화로부터 시작하여 사회경제적 민주화으로 나가는 단계별 실천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모델일 뿐 유일한 모델은 아니다. 보다 급진적이고

(28) 拙稿, “전환기의 변동양상과 요인에 관한 연구 : 관료적 권리주의의 붕괴와 민주화를 중심으로”, 仁谷 黃性模博士 회갑기념논문집, 社會構造와 社會思想, 심성당, 1986, 569-601면.

단절적인 모델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민중개념을 계급노선으로 좁게 잡지 않는 한, 급진적 혁명모델은 이론구조상 성립하기 힘들다. 설사 이런 노선에서 혁명모델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허한 것으로 끝날 가능성 이 큰데, 이것은 자체의 세력기반은 약한 데 반해 강경반응은 매우 그럴 듯하고 중간계급의 항배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계급노선의 민중운동이 급진성을 띠게 될 때 중간계급의 집단들은 분열되거나 결과적으로 강경대응 논리를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이들 집단과의 제휴 속에서 전개 가능한 민중운동을 스스로 차단시킬 뿐 아니라 이런 전제 위에서는 급진적인 민중운동 자체도 성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을 것처럼 보인다.

「민중사회학」의 좌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역사비교의 방법을 통해 시야를 넓혀볼 필요는 여기에서 분명해진다. 예컨대 남미의 민중정치가 그 화려했던 승리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 실패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36년간의 독재정치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민주화가 1975년 프랑코의 사후 왜 그토록 신속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한 비결은 민중부문의 고도의 자제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민주화를 향한 집권층 내부의 확고한 의지에 상응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정치적 전환기에 있을 수 있는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민중부문의 지도자들이 과도한 욕구의 표출을 스스로 자제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선행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노동대중이 지지함으로써 정치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말하자면 스페인의 「민중사회학」과 민중정치가 발휘한 책임윤리의 교훈적 사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남미의 민중주의가 무너지던 당시의 비극적 경험은 그 반대에 속한다. 한국의 「민중사회학」은 이런 역사적 경험을 결코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VII. 개방적 변증법을 향하여

이상의 논의가 「민중사회학」의 이론구조에 미치는 합의는 보편성과 구체성의 동시적 구현으로 요약될 듯 싶다. 보편성이 뜻하는 것은 인식론적 민중주의에 주목할 때 「민중사회학」은 사회과학의 메타이론으로, 또 하나의 보

편적인 연구 프로그램로 어디서나 의미있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학적 연구의 초점은 삶을 꾸려가는 민중의 능력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 등에서 발전되어 나온 방법론적 논의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제된 민중의 참여를 지향하는 특정국면의 「민중사회학」은 구체적인 정치상황과 엇물려 당파적일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론과 실천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면서도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건 「민중사회학」과 민중의 관계는 달혀진 완전한 회로로서가 아니라 열려진 복합적 회로로 특징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중사회학」은 특유의 문제의식에서 분석과 대화의 릴레이를 통해 민중의 현실이해를 돋고 그들의 실천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민중을 神話化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중운동의 조건과 문제점을 비판함으로써 민중운동의 자기성찰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항상 미완성의 여백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 사이에는 긴장이 있고 이를 통해 서로가 相補의인 관계를 발전시켜간다.

따라서 「민중사회학」의 당파성을 1차원적 수준의 동지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민중사회학」과 민중운동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단결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막스 베버식으로 말하자면 「민중사회학」은 심정윤리와 더불어 책임윤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때로는 심정윤리의 호소력을 억제하고 사회과학의 현실분석에 입각하여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민중은 항상 결백하고 순수하며 모든 잘못은 권력자로부터 나온다는식의 관점을 피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중이 비판적으로 자신과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민중사회학」의 당파적 기능이 개방되고 성찰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중사회학」을 이끌어가는 변증법을 종래의 「달혀진 변증법」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열려진 변증법」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²⁹⁾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열려진 언어의 특성이기도 하다. 「민중사회학」은 그 자체가 학문인 이상 일차적으로 지식의 고유한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산만한 경험을 체계화시키고, 불명료한 것을 명료하게 조직하며, 경험의 세계에

(29) Albrecht Wellmer, *Zur Dialektik von Moderne und Postmoderne*, Suhrkamp, 1985.

서 포착되지 않는 구조화된 힘을 인식의 대상으로 부각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중사회학」은 자신을 특권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과학주의적인 자기인식을 거부한다. 「민중사회학」은 오히려 자신을 완벽한 지식으로 보기보다 미완성의 하나의 개입(intervention)으로 보며⁽³⁰⁾, 그러기에 대화를 통해 수정과 보완 및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이 논리는 기본적으로 열려진 대화로 특징된다. 「민중사회학」은 일련의 사회분석을 가능한 한 엄밀하게 수행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열려진 대화를 통해 자신의 참됨을 증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 「민중사회학」의 대상인 민중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민중사회학」은 학문의 인식론적 구조로부터 사회민주화를 추진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특성을 우리는 「언술변증」의 개념으로 파악 할 수 있다.⁽³¹⁾

결론적으로 「민중사회학」은 계급과 같이 과학적이기는 하지만 개념의 고리가 완결되어 있다는 뜻에서 달혀진 개념들에 의존하기보다 열려진 개념들에 의존해야 한다. 또 민중개념 그 자체가 사실은 열려진 개념이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줄 믿으나 실천으로서의 언어 혹은 「언술행위」에의 관심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우리가 짜임새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아직 개념도구 보다 상상력이 앞서 질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이 글에서도 경직된 계급 모델은 분명히 비판했지만 계급론적 사고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민중을 특수한 계급개념으로 한정 혹은 환원시키기 보다는 좀 더 긴 눈으로 전환기 사회의 변동양상을 고찰하고 이에 비준을 제시한다는 생각으로 민중을 사회통합의 핵심개념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강조되었으리라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계급이 민중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민중이 계급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韓完相교수의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노선에서 「민중사회학」의 구조를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작업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30) 이러한 개입의 개념은 : Alain Touraine, *The Voice and the Eye: An Analysis of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1981, pp. 213-222.

(31)拙稿, “사회과학과 言述辯證의 방법론”, 의국문학, 1986(봄호).